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군 가족복지 지원 인식의 상호지향성

Mutually Perceive between Military Executive Members and Local Residents on the Military Family Welfare Support

정미경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Mee-Kyung Jeong(mkjeong@kangwon.ac.kr)

요약

본 연구는 군 가족복지 지원인식에 대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상호지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군 간부 217명, 지역주민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두 집단 간 인식의 객관적 일치도에서, 군 간부들은 지역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두 집단 간 인식은 불일치하였다. 둘째, 두 집단 간 인식의 주관적 일치도(1)에서, 군 간부의 실제 지원인식 정도와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지원인식 간에는 상호 불일치하였다. 주관적 일치도(2)에서, 지역주민의 실제 지원인식과 지역주민 추정 군 간부의 요구 간에는 상호 불일치하였다. 셋째, 두 집단 간 인식의 정확도(1)에서, 군 간부는 지역사회에 보다 더 높은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지역주민이 추정하기에 군 간부들은 지역사회 지원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도(2)에서, 지역주민의 실제 지원인식과 군이 추정한 지역주민의 지원인식 간에는 일치하지 않았다. 넷째, 두 집단 간 인식의 메타동의에서, 군 가족복지 지원에 대하여 군 간부가 추정하고 있는 지역주민 인식과 지역주민이 추정하고 있는 군 간부의 인식은 낮은 수준에서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군 가족복지 | 군 간부 | 지역주민 | 지원 인식 | 상호지향성 |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how military executive members and local residents mutually perceive the military family support. The 217 individuals from the military executive and the 191 local residents took part in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he sense of the agreement, the respondents from the military executive had higher perception when it comes to the necessity of the community support, whilst the answer from their counterparts did not. Second of all, in terms of the congruence(1) on this issue, the perception levels that the each group of respondents showed are not corresponded, besides each group had different level of demands on the community resour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ongruence(2). Third, regarding the accuracy(1), the military executive members called for higher coverage of community supports whilst the local residents perceived that the executive members might be having less demands. The accuracy(2) too shows the different perception on the resources that the each group has. Last of all, for the meta-agreement, which indicates how each group found its counterpart's perception, were only corresponded at the lower level.

■ keyword : | Military Family Welfare | Military Executive Members | Perception on the Resources | Mutual Perception |

* 본 연구는 2015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수행되었음(No- 201510090)

접수일자 : 2015년 08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9월 11일

수정일자 : 2015년 09월 11일

교신저자 : 정미경, e-mail : mkjeong@kangwon.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군대조직은 일반조직에 비해서 '육십쟁이 제도' 혹은 '총체적 제도'라고 말할 정도로 군의 요구사항이 최우선시 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1-5]. 군조직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군 가족 또한 군의 요구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하지만[6], 잦은 부대이동과 근무지 특성(사회문화적 고립, 교육여건 불비,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인해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군 인력획득과 전투력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이처럼 군인과 군 가족에게 군의 요구만 있고 제반 여건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군보다는 가족을 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군 조직을 직업적 성격으로 인식하게 될수록 이러한 군인의 직업적 환경은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인가족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8]. 그러므로 일생의 대부분을 국토방위에 전심전력하면서 군을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들에 대하여 공공주의적인 관점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군인이기 이전에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고, 가족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하고 있다[9-15]. 그러나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군 가족이 어느 정도 건재하며, 가족이 겪어야 하는 많은 환경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가 군인들의 업무수행[16]이나 군 생활 만족도[17], 군인의 복무기한 연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군복무의 특수성으로 전방과 후방, 부대와 가정이라는 관계 속에서 한 곳에 정착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18]인 직업군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이는 국가안보와도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매우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겠다.

군의 사기를 결정하는 군 외부적 요인은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군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이다. 군과 지역사회 간 긍정적 조직-공중 관계성은 조직과 공중 모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상호 발전적이고 유용하다

[19]. 따라서 지역사회와 군 간의 인식 정도는 군인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복지 지원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군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 복무를 하더라도 군인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20][21]되기 위해서는 군 조직 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자원은 지역사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확보할 수 없는 자원은 군 조직을 통해서 서로 보완되는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군인가족의 복지욕구는 경제문제, 가족건강 및 영양, 주거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 취미여가활동, 노후설계, 가족문화체험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표출[22-24]되고 있지만, 군 조직 하나만으로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욕구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군은 국방예산의 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 '09-'13년 중장기 예산계획[25]에서도 국방비 운영 방향은 방위력개선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국방경영에 있어서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자산을 활용해야하는 등 이후에도 군인가족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된다.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군인가족에 대해 규정은 하고 있으나 어떠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근거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을 통해 군인가족지원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군인과 그 가족은 불가분의 관계이어서 군 혹은 군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필연적으로 군인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이어져야 하므로[26] 민과 군은 이원화될 수 없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군 조직이 모체인 지역사회와 융합된 체계로 자리 잡느냐 또는 동떨어진 집단으로서 존재하느냐는 궁극적으로 민주적 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역 소재 군 부대와 지역사회 간의 인식격차는 정부와 군이 추진하려고 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이는 곧 정책 비용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27].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군인가족에게 상당한 인내와

의무감을 요구하면서도 이들을 지원하는 노력은 크게 부족하다. 실제로 사회복지영역에서도 군인가족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볼 때, 분명히 사회복지의 정책과 실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술적 연구와 실천적 논의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 원인에는 군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연구자 수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군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따른 현실적 제약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의 대상으로서 군인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에 따른 연구는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군인가족 관련 선행 연구들[28-35]은 군인가족의 삶 자체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며, 군인가족과 지역복지 자원과의 관계 연구[36][37]가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인가족과 지역주민 간의 관계 인식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군 가족복지실천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군인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를 지원하려면, 두 집단 간의 상호 이해와 오해의 수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지원 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에 군인가족복지 지원에 대하여 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일치 혹은 간격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향후 두 집단 간 관계성 관리 및 군인가족복지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국방복지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군인가족복지 지원에 대한 두 집단 간 객관적 일치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군인가족복지 지원에 대한 두 집단 간 주관적 일치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군인가족복지 지원에 대한 두 집단 간 정확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군인가족복지 지원에 대한 두 집단 간 메타 동의를 어떠한가?

II. 이론 및 선행연구

1. 군인가족의 특징

군 직업은 사회의 일반직업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군직업은 노동 3권의 제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 군형법의 적용, 정치적 자유의 제한,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 일반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38]. 그리고 연중 지속되는 각종 훈련과 검열, 대기 등으로 근무시간 자체가 무한정하며, 심리적 긴장이 지속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직업군인은 군 임무수행을 위한 가족과의 심각한 별거문제와 군 직무 특성상 위험한 부상과 높은 사망률, 인사제도상 빈번한 재배치로 인한 잦은 이사, 군인가족의 행동에 대한 주변의 기대로서 일상에서 유무형의 통제와 시선의 부담, 장시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근무 등[39][40]으로 인해 군 가족은 민간사회의 가족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

국방부[41]가 직업군인 5,824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2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군인들은 자녀양육, 교육여건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3명 중 1명(31.8%)은 근무지 변경으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내 10개 부대에 주둔하는 군사관 부사관의 배우자 7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군인가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전속으로 인한 이주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잦은 이사가 자녀의 교육문제를 동반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증가시키며, 배우자의 안정적인 취업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42].

대부분의 직업군인들은 직장-가정 사이의 갈등적인 상황을 안고 복무중이다[43]. 군인들의 이사 횟수는 11회 이상이 대령의 약 70%, 중령의 5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령의 50%, 중령의 34%가 가족들과 별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거사유는 자녀교육이 46%로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자녀의 경우만 하더라도 최소 1회 이상 전학하는 경우가 33%이며, 약 49%가 1-3회 전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의 50%정도가 읍·면 이하 지역에 근무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가족은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관사의 약 45%가 25년 이상, 15평 이하로 열악한 상태이고 잦은 이사로 인해 가족과 별거하는 직업 군인들도 상당 수 있다[44]. 실제로 군 간부가족은 별거율이 30%에 이르며, 이로 인해 일정기간 아버지의 역할이 상실된 결손가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45]. 장기간의 아버지부재는 어머니 중심의 가정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고[46], 장기간 별거 후 부부와 자녀와의 재통합과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군인의 아내들은 민간인이지만, 남편의 계급에 따라 부인들의 지각되는 지위도 결정된다[47]. 특히 배우자의 진급은 가족 내 생활사건으로 군인가족의 경우 자존심의 상실, 실질적 혹은 상징적인 상실을 의미할 수 있다[48].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49]에서도 군 직업은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약 40%의 고교 연령의 아이들이 사회적 부적응, 학습수행 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군 직업에 내재된 원천적인 특성(잦은 이사와 전학,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격리 등)으로 인해 군인자녀들은 보육, 양육, 교육, 성장발달 등에 있어 부정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물론 군인가정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취약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50-55]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그러나 민간의 일반가정에 비해 취약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직장가정 영역에 대한 관심이 직장-가정 갈등의 부작용(결근, 지각, 이직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관심이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가족을 우선시하는 근로자의 인식변화로 인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군인가족의 복지에 대하여 국가나 국방부 차원에서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정책연구나 검토는 물론, 체계적인 지원정책도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군사회복지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군인가족복지 지원에 대한 군과 지역사회 간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군인가족복지 지원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군은 1950년대 초창기 및 전란기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생계유지 수준에 지나지 않은 군 복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치안과 국가안보의 보루로서 국군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군 전력 발전차원에서 군 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 수준의 기반 마련에 주력해 오고 있다[56]. 1998년에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도입 운영하고, 2008년 3월 1일부터 군인기본복지법이 시행되었으며, 2008년 9월에 국군복지단을 창설하고, 2009년 4월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이 발표[57]되었다. 이와 같은 군인복지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군의 전력증강 분야를 중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58-60]. 그러다보니 군인가족들의 어려운 생활여건은 우수한 군인의 조기전역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도 우수인재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핵심인재중심, 시가주의 보상 등의 인사혁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직업군인체가 민간분야와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경우 미래 소요 국방인력의 양적·질적 소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61-63].

군인가족지원에 관한 국방부 차원의 법적 근거는 「군인복지기본법」이다. 동법 제2조(정의)에서 “군인가족”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자녀의 보육 및 교육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특별보호대상 가족의 기타 복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군인복지기금법」에서도 제6조(기금의 용도)에서 군인 및 군무원, 예비역 등에 대한 지원근거는 되어 있으나, 자녀 장학사업 이외에는 군인가족에 대한 복지기금의 사용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군인가족에 대해 규정은 하고 있으나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을 통해 군인가족지원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주로 취약계층의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군인

가족을 위한 별도의 예산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부 차원에서 군인가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예산확보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3. 군과 지역사회, 그리고 군인가족

군대는 지역사회 입장에서 볼 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군 주둔에 대한 부정적 효과만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는 무시하거나 간과해왔다. 그 결과 군사시설은 기피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 정착, 그리고 도시 광역화가 진전됨에 따라 군사시설과 군부대가 지역사회로부터 기피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64].

그러나 국가안보의 개념이 재난지원 활동이 군의 당연한 임무가 되면서 군과 지역사회는 호혜적 상호작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군부대는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일부를 지역사회에서 조달함으로써 군과 지역사회는 상호 목표를 위해 결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과 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이론을 조직간 협력이론에서 찾아본 결과, 군과 지역사회 간에는 관찰된 83건의 교류사례 중에서 초기의 교류유형인 상호탐색형과 상호지원형이 65건(78%)으로 분석되었으며, 쌍방 간에 신뢰에 기초한 고도의 교류유형인 정책협의 혹은 공동생산형은 7건(8%)으로 조사되었다[65]고 밝혔다. 따라서 군과 지역사회 간에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가 군사시설에 대한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관점에 의한 협동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금의 군과 지역사회는 상호 호혜적 또는 대립적 요소에 의해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민군관계이론으로는 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66]고 하였다. [67]보도에 따르면, 접경지역인 화천군은 장애인전용 복지시설 건립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였다.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군 당국의 노력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그동안의 민군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국가안보의 개념이 재난지원 활동이 군의 당연한 임무가 되면서 군과 지역사회는 호혜적 상호작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군부대는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일부를 지역사회에서 조달함으로써 군과 지역사회는 상호 목표를 위해 결합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직업군인이라고 했을 때, 군인 그 자체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병력’으로 지칭되는 군 가족이 군부대 주둔 지역사회에서 삶의 안정감을 확보할 때 이는 곧 국방력강화로 연결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녀와 함께 지역에서 일상을 보내는 군 가족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복지 지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이어져야 한다[68].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약을 통해 2008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군인가족 행복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8년에는 업무협약과 아울러 군인가족 욕구조사와 총 12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46회의 프로그램(1,371명 참석)을, 2009년에는 총 4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60개 부대와 사업(9,403명) 및 군인가족지원을 위한 연구모형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를, 2010년에는 총 4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약 67개 부대와 사업 및 군인가족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혼준비, 신혼, 아버지 교육, 부부관계, 자녀양육, 자녀와 함께하기, 의사소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국방부[69]는 ‘2014년 군인가족행복지원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통보’ 공문에서 국직부대, 육군, 해군, 공군에 지원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관련 공문에서는 국직부대 지원 5개 지자체, 육군 지원 16개 지자체, 해군 지원 7개 지자체, 공군 지원 38개 지자체 등 군 가족복지를 위하여 66개 지자체(중복 지자체 제외)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지역 주둔 군인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인가족의 복지욕구 해결의 접근 방안으로서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4개의 생활유형으로 구분하고,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복지자원을 조사 분석하였다

[70]. 그 결과, 군인가족의 복지욕구와 기초생활권의 기본 복지수요 및 실제 지역사회 복지자원 공급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활용한 군인가족지원센터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군 가족과 장병들의 복지공약도 제시되고 있다 [71]. 강원도 000후보는 군 장병과 도내 거주 군인가족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약으로 민·관·군 협력기구를 만들어 군 관련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제대군인 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자급과 정착 프로그램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격오지 등 제반 생활여건이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72], 이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가족복지정책의 우선적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군인가족들도 일반사회인이 누리는 보편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군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가족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군인가족복지라고 했을 때, 군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군인가족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활용과 지원이 현재보다는 크게 향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인가족복지를 위하여 군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

만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호보완적, 동반자적 관계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가능 수요를 파악하여 군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국방부에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가능 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군인가족복지 지원에 대한 군과 지역사회 간 인식이 어떠한지에 따른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III.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73]의 상호지향성 모델에 기초하여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인식의 상호지향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측정 요소는 객관적 일치도,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 메타 동의 등이며,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틀은 객관적 일치도 (agreement), 주관적 일치도(perceived agreement), 정확도(accuracy), 메타 동의(meta-agreement)를 기본 변인으로 집단 간·집단 내 인식 혹은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첫째, ‘객관적 일치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혹은 태도가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 일치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두 집단은 ‘상호지향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관적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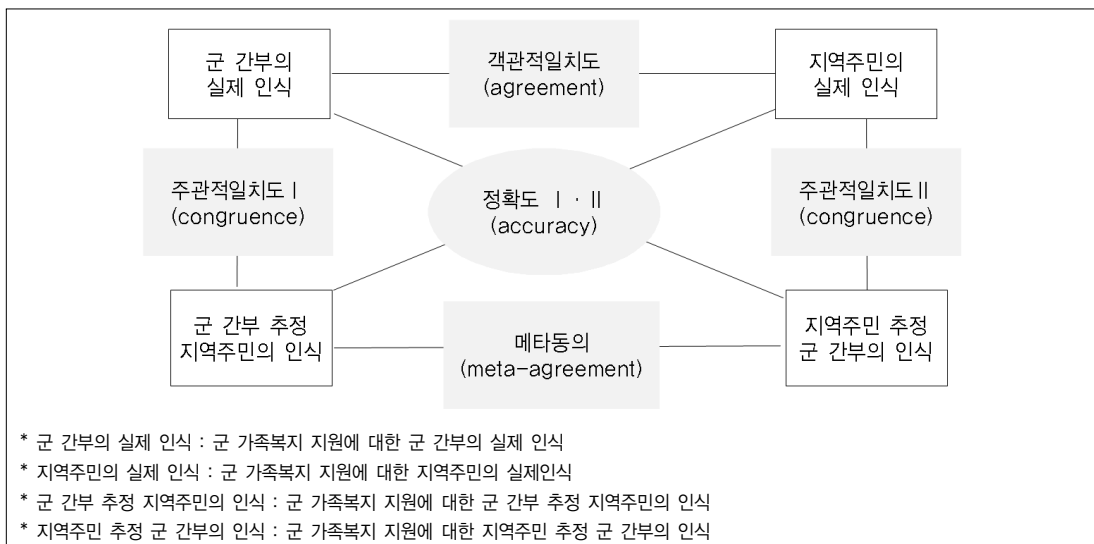


그림 1.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군 가족복지 지원 인식의 상호지향성 분석 틀

도’는 자신의 인식과 상대방의 인지에 대한 자신의 인식(주관적 일치도 1), 혹은 상대방의 인식과 자신의 인지에 대한 타인의 인식(주관적 일치도 2)이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셋째, ‘정확도’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말해 주는 것으로, 상대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넷째, ‘메타동’의는 상호 간의 인식 추정이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IV.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의 군 가족복지 지원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직업군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군 간부는 강원도 소재 00지역 00부대에서 근무 중인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을 조사하기 위하여 00부대에 설문관련 공문을 시행한 후, 설문내용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받았으며, 연구에 활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주민은 강원도 소재 00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였으며, 최종 수거된 19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군 가족복지지원 욕구 문항은 군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군인가족지원 욕구 실태조사[74]’에서 군인가족에게 군인가족복지 향상 우선 지원 희망 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률이 높았던 문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문제, 가족건강 및 영양, 주거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 취미여가활동, 노후설계, 가족문화체험활동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본 연구에서 군 가족복지지원 문항으로 활용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7점 척도(1=강한 부정, 7=강한 긍정)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3. 신뢰도 및 타당도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항목 간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을 구성하는 13개의 측정 문항은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분산설명력은 68.20%를 설명하고 있다. 군 가족복지 지원 인식 전체의 Cronbach’s α 값은 0.961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양호하다.

표 1.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수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요인적재량	Cronbach's α
군 가족복지 지원인식	-자녀양육교육/상담	5.13	1.38	.74	.961
	-가족문화활동지원	5.19	1.35	.78	
	-가족돌봄지원상담	5.14	1.42	.83	
	-가정경제문제교육/상담	4.92	1.43	.75	
	-건강·영양주거교육/상담	5.09	1.40	.85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	5.02	1.34	.85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	4.96	1.42	.82	
	-자녀진로지도/상담	5.19	1.35	.86	
	-가족친화문화체험활동지원	5.20	1.40	.84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	5.12	1.41	.87	
	-아버지역할교육/상담	5.07	1.36	.83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	5.06	1.33	.86	
	-복지관련정보지원	5.19	1.40	.85	

누적분산설명력(%)=68.20 KMO=.96 Bartlett 구형성검정 $X^2=4585.32$ Sig.=.000

*** p<.001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을 살펴보고, 대상자의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 검정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군 간부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는 직업군인 217명, 지역주민 191명이 참여하였다. 군 간부 특성에서 성별로는 남자 188명(86.6%), 여자 29명(13.4%)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94명(43.3%), 30대 73명(33.6%), 40대 35명(16.1%), 50대 15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 117명(53.9%), 기혼 100명(46.1%)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졸이상 148명(68.2%), 고졸 64명(29.5%), 중졸이하 1명(0.5%)로 나타났으며, 계급은 준·부사관급 135명(62.2%), 위관급 53명(24.4%), 영관급 25명(11.5%)로 나타났다. 근무지이동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55명(25.3%), 5년에 한번 49명(22.6%), 4년에 한번 23명

(10.6%), 3년에 한번 21명(9.7%), 1년에 1회 이상 13명(6.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주민의 경우 여자 111명(58.1%), 남자 79명(41.4%)로 나타났고, 연령은 50대 54명(28.3%), 30대 53명(27.7%), 40대 49명(25.7%), 60대 17명(8.9%), 20대 15명(7.9%), 70대 이상 3명(1.6%)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로 기혼자 151명(79.1%), 미혼 40명(20.9%)로 나타났으며, 학력으로는 대졸이상 114명(59.7%), 고졸 65명(34%), 중졸이하 9명(4.7%)로 나타났다. 직업은 서비스업 52명(27.2%), 사무직 41명(21.5%), 기타 38명(19.9%), 공무원 31명(16.2%), 전업주부 27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문제에 따른 두 집단 간 상호지향성 결과 분석

연구문제 1: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의 실제 인식과 지역주민 실제 인식 간 객관적 일치도는 어떠한가?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실제 인식의 객관적 일치도를 알아보고자 독립표본(independent sample) 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검증결과,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38)이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76)보

표 2.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실제 인식의 객관적일치도

변수	군 간부의 인식(aa)	지역주민의 실제인식(bb)	평균차이	t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	5.38	4.76	.62	5.76***
-자녀양육교육/상담	5.37	4.87	.50	3.68***
-가족문화활동지원	5.51	4.81	.70	5.36***
-가족돌봄지원상담	5.47	4.74	.73	5.31***
-가정경제문제교육/상담	5.27	4.53	.74	5.39***
-건강·영양주거교육/상담	5.38	4.74	.64	4.70***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	5.23	4.76	.47	3.58***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	5.14	4.76	.38	2.68**
-자녀진로지도/상담	5.55	4.71	.84	6.35***
-가족친화문화체험활동지원	5.56	4.74	.82	6.09***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	5.47	4.69	.78	5.68***
-아버지역할교육/상담	5.24	4.88	.36	2.67**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	5.29	4.76	.53	4.03***
-복지관련정보지원	5.49	4.83	.66	4.85***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t=5.76, p<.001$) 높게 나타남으로써 객관적 인식은 일치하지 않았다. 각 하위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양육교육/양육/상담’의 경우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37$)이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68, p<.001$), ‘문화활동지원’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51$)이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36, p<.001$). ‘가족돌봄지원상담’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47$)이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5.31, p<.05$), ‘경제문제교육/상담’의 경우도 군의 실제 인식($M=5.27$)보다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5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39, p<.001$). ‘건강·영양·주거교육/상담’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38$)보다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70, p<.001$).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의 경우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23$)이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58, p<.001$),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14$)이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68, p<.001$). ‘자녀진로지도/상담’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55$)이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6.35, p<.05$), ‘가족친화문화 체험활동지원’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56$)보다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7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09, p<.001$). 마지막으로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47$)보다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68, p<.001$). ‘아버지지역활교육/상담’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24$)보다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67, p<.001$).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29$)보다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03, p<.001$). ‘복지관련정보지원’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49$)보다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8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85, p<.001$). 이러한 결과는 군 가족복지지원을 구성하는 5개의 하위요인 모

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실제 인식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하여 군 간부가 지역주민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의 생각은 군 간부보다 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하여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의 실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2: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또는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과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 인식(또는 지역주민 추정 군 간부의 인식)의 주관적 일치도는 어떠한가?

첫째,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의 실제 인식과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 인식 간의 주관적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응표본(paired sample) t-test를 통해 주관적 일치도를 검증한 결과,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38$)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5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t=9.16, p<.001$)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군 간부의 실제 인식과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양육 교육/양육/상담’의 경우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37$)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4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8.17, p<.001$), ‘문화활동지원’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51$)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8.48, p<.001$). ‘가족돌봄지원상담’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47$)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5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7.93, p<.05$), ‘경제문제교육/상담’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27$)보다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4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62, p<.001$). ‘건강·영양·주거 교육/상담’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38$)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53, p<.001$).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

표 3.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의 실제 인식과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 인식 간 주관적일치도(1)

변수	군 간부의 실제인식(aa)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ba)	평균차이	t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	5.38	4.56	.82	9.16***
-자녀양육교육/상담	5.37	4.42	.95	8.17***
-가족문화활동지원	5.51	4.51	1.00	8.48***
-가족돌봄지원상담	5.47	4.54	.93	7.93***
-가정경제문제교육/상담	5.27	4.47	.80	6.62***
-건강·영양주거교육/상담	5.38	4.65	.73	6.53***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	5.23	4.48	.75	6.75***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	5.14	4.49	.65	5.41***
-자녀진로지도/상담	5.55	4.62	.93	8.49***
-가족친화문화체험활동지원	5.56	4.65	.91	8.25***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	5.47	4.53	.94	8.59***
-아버지역할교육/상담	5.24	4.63	.61	5.35***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	5.29	4.54	.75	6.95***
-복지관련정보지원	5.49	4.79	.70	6.48***

*** p<.001

담'의 경우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23)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6.75, p<.001$),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14)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41, p<.001$). '자녀진로지도/상담'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55)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8.49, p<.05$), '가족친화문화체험활동지원'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56)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8.25, p<.001$).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47)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8.59, p<.001$). '아버지역할교육/상담'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24)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35, p<.001$).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29)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5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95, p<.001$). '복지관련정보지원'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49)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48, p<.001$). 이러한 결과는 군 가족복지지원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요소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남으로써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의 실제 인식과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이 주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하여 군 스스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지원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군 간부가 생각하기에 지역주민의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생각은 군 간부보다 덜 긍정적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과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에 대해 주관적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응표본(paired sample)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주관적으로 일치했다. 또한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을 구성하는 모든 문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 간에는 주관적으로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지역주민 스스로의 인식과 지역주민이 추측하는 군의 인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3: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의 실제 인식(또는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과 지역주민 추정 군 간부의 인식(또는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의 정확도는 어떠한가?

표 4.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과 지역주민 추정 군 간부 인식의 주관적 일치도(2)

변수	지역주민의 실제인식(bb)	지역주민 추정 군 간부의 인식(ab)	평균차이	t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	4.76	4.81	-.05	-.97
-자녀양육교육/상담	4.87	4.87	-	.10
-가족문화활동지원	4.81	4.85	-.04	-.52
-가족돌봄지원상담	4.74	4.87	-.13	-1.40
-가정경제문제교육/상담	4.53	4.67	-.14	-1.47
-건강·영양주거교육/상담	4.74	4.73	.01	.05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	4.76	4.79	-.03	-.35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	4.76	4.72	.04	.41
-자녀진로지도/상담	4.71	4.82	-.11	-1.04
-가족친화문화체험활동지원	4.74	4.84	-.10	-1.05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	4.69	4.88	-.19	-1.94
-아버지역할교육/상담	4.88	4.81	.07	.95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	4.76	4.82	-.06	-.70
-복지관련정보지원	4.83	4.88	-.05	-.74

*** p<.001

첫째,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해 군 간부의 실제 인식과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 간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independent sample)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해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38)이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M=4.8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t=5.53, p<.001)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두 집단의 인식 간에는 정확도가 일치하지 않았다.

각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양육교육/양육/상담’의 경우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37)이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M=4.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77, p<.001), ‘가족문화활동지원’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51)이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M=4.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59, p<.001). ‘가족돌봄지원상담’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47)이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M=4.87)보다 높은

표 5.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의 실제 인식과 지역주민 추정 군 간부의 인식 간 정확도(1)

변수	군 간부 실제인식(aa)	지역주민 추정 군 간부의 인식(ab)	평균차이	t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	5.38	4.81	.57	5.53***
-자녀양육교육/상담	5.37	4.87	.50	3.77***
-가족문화활동지원	5.51	4.85	.66	5.59***
-가족돌봄지원상담	5.47	4.87	.60	4.65***
-가정경제문제교육/상담	5.27	4.67	.60	4.60***
-건강·영양주거교육/상담	5.38	4.73	.65	5.05***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	5.23	4.79	.44	3.39**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	5.14	4.72	.42	3.13**
-자녀진로지도/상담	5.55	4.82	.73	5.92***
-가족친화문화체험활동지원	5.56	4.84	.72	5.57***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	5.47	4.88	.59	4.61***
-아버지역할교육/상담	5.24	4.81	.43	3.40**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	5.29	4.82	.47	3.65***
-복지관련정보지원	5.49	4.88	.61	4.76***

* p<.05, ** p<.01

것으로 나타났고($t=4.65, p<.05$), ‘경제문제교육/상담’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27$)이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M=4.6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60, p<.001$). ‘건강·영양·주거 교육/상담’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38$)이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M=4.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05, p<.001$).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의 경우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23$)이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M=4.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39, p<.001$),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14$)이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M=4.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13, p<.001$). ‘자녀진로지도/상담’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55$)이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M=4.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5.92, p<.05$), ‘가족친화문화체험활동 지원’의 경우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56$)이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M=4.8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57, p<.001$).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47$)이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M=4.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61, p<.001$). ‘아버지역할교육/상담’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24$)이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M=4.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3.40, p<.001$).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29$)이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M=4.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65, p<.001$). ‘복지관련정보지원’도 군 간부의 실제 인식($M=5.49$)이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M=4.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76, p<.001$).

이러한 결과는 군 가족복지지원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의 실제 인식과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이 정확도가 일치하지 않았다. 정확도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의 실제 생각과 지역주민 추정 군 간부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 간부와 지역주민 상호 간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표 6]과 같이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정확도가 일치했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 가족복지지원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는 ‘자녀양육교육/양육/상담’의 경우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87$)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42$)보다 높은

표 6.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과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 인식 간 정확도(2)

변수	지역주민의 실제인식(bb)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ba)	평균차이	t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	4.76	4.56	.20	1.72
-자녀양육교육/상담	4.87	4.42	.45	3.34**
-가족문화활동지원	4.81	4.51	.30	2.24*
-가족돌봄지원상담	4.74	4.54	.20	1.43
-가정경제문제교육/상담	4.53	4.47	.06	.44
-건강·영양·주거교육/상담	4.74	4.65	.09	.68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	4.76	4.48	.28	2.10*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	4.76	4.49	.27	1.99*
-자녀진로지도/상담	4.71	4.62	.09	.69
-가족친화문화체험활동지원	4.74	4.65	.09	.70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	4.69	4.53	.16	1.20
-아버지역할교육/상담	4.88	4.63	.25	1.88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	4.76	4.54	.22	1.65
-복지관련정보지원	4.83	4.79	.04	.32

** p<.01, *** p<.001

것으로 나타났으며($t=3.34, p<.01$), ‘가족문화활동지원’의 경우도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81$)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4, p<.05$).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의 경우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76$)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2.10, p<.05$),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의 경우도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M=4.76$)이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M=4.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99, p<.05$). 즉,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과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 간에는 ‘자녀양육교육/상담’, ‘가족문화활동지원’,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 ‘부부관계 증진교육/상담’ 등 4개의 하위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정확도가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돌봄지원상담’, ‘경제문제교육/상담’, ‘건강·영양·주거교육/상담’, ‘자녀진로지도/상담’, ‘가족친화문화체험활동’,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 ‘아버지역할교육/상담’,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 ‘복지관련정보’ 등 8개의 하위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정확도가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는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과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은 4개의 하

위요인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8개의 하위요인에서는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과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 간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4: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 인식과 지역주민 추정 군 인식 간의 메타 동의는 어떠한가?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의 상호 추정된 인식 차이, 즉 메타동의 분석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인식은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과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의 상호 추정된 인식 차이 분석에서 메타동의 불일치, 즉 상호 추정인식의 불일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녀양육교육·상담’, ‘가족문화활동지원’, ‘가족돌봄지원상담’,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상호 추정된 인식의 불일치를 나타냈다.

표 7.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상호 추정 인식에 대한 메타동의

변수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ba)	지역주민 추정 군의 인식(ab)	평균차이	t
군 가족복지지원 인식	4.81	4.56	.25	2.33*
-자녀양육교육/상담	4.87	4.42	.45	3.45**
-가족문화활동지원	4.85	4.51	.34	2.83**
-가족돌봄지원상담	4.87	4.54	.33	2.54*
-가정경제문제교육/상담	4.67	4.47	.20	1.48
-건강·영양·주거교육/상담	4.73	4.65	.08	.62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	4.79	4.48	.31	2.47*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	4.72	4.49	.23	1.78
-자녀진로지도/상담	4.82	4.62	.20	1.58
-가족친화문화체험활동지원	4.84	4.65	.19	1.51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	4.88	4.53	.35	2.80**
-아버지역할교육/상담	4.81	4.63	.18	1.39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	4.82	4.54	.28	2.15*
-복지관련정보지원	4.88	4.79	.09	.75

* $p<.05$, ** $p<.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상호지향성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군 간부 217명, 지역주민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두 집단 간 상호지향성 형태를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아래 [표 8]에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일치도’로서, 어떤 대상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혹은 태도가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 일치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두 집단은 ‘상호지향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실제적 인식은 군 가족복지지원 전체 13개 하위요인(자녀양육교육/상담, 가족문화활동지원, 가족돌봄지원상담, 가정경제문제교육/상담, 건강·영양·주거교육/상담,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 자녀진로지도/상담, 가족친화문화체험활동 지원,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 아버지역할교육/상담,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 복지관련정보지원)에서 상호 불일치(aa>bb)로 나타났다. 즉, 군 가족복지 지원에 대하여 군 간부들은 지역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은 군 간부보다 더 낮게 지역사회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으로써 두 집단 간에는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대하여 군 가족, 병사, 군 간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심리·사회적 복지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상호협력과 일치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의 군인가족복지 지원 인식의 차이가 지역주민들의 군 조직에 대한 태도와 신뢰로부터 기인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관계점검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군인가족복지에 대한 지원은 국방부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부족치 않으므로 실제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의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관적 일치도’로서, 군 간부의 실제 인식과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주관적 일치도(1), 그리고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과 지역주민 추정 군 간부의 인식-주관적 일치도(2)가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주관적 일치도(1)’에서는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하여 군 간부의 실제 인식과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 인식 간에는 전체 13개 하위요인(자녀양육교육/상담, 가족문화활동지원, 가족돌봄지원상담, 가정경제문제교육/상담, 건강·영양·주거교육/상담,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 자녀진로지도/상담, 가족친화문화

표 8.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상호지향성 형태 분석

요인	객관적 일치도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		메타 동의
		(1)	(2)	(1)	(2)	
-자녀양육교육/상담	aa)bb	aa)ba	bb=ab	aa)ab	bb)ba	ba)ab
-가족문화활동지원	aa)bb	aa)ba	bb=ab	aa)ab	bb)ba	ba)ab
-가족돌봄지원상담	aa)bb	aa)ba	bb=ab	aa)ab	bb=ba	ba)ab
-가정경제문제교육/상담	aa)bb	aa)ba	bb=ab	aa)ab	bb=ba	ba=ab
-건강·영양주거교육/상담	aa)bb	aa)ba	bb=ab	aa)ab	bb=ba	ba=ab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	aa)bb	aa)ba	bb=ab	aa)ab	bb)ba	ba)ab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	aa)bb	aa)ba	bb=ab	aa)ab	bb)ba	ba=ab
-자녀진로지도/상담	aa)bb	aa)ba	bb=ab	aa)ab	bb=ba	ba=ab
-가족친화문화체험활동 지원	aa)bb	aa)ba	bb=ab	aa)ab	bb=ba	ba=ab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	aa)bb	aa)ba	bb=ab	aa)ab	bb=ba	ba)ab
-아버지역할교육/상담	aa)bb	aa)ba	bb=ab	aa)ab	bb=ba	ba=ab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	aa)bb	aa)ba	bb=ab	aa)ab	bb=ba	ba)ab
-복지관련정보지원	aa)bb	aa)ba	bb=ab	aa)ab	bb=ba	ba=ab

체험활동 지원,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 아버지역할교육/상담,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 복지관련정보지원)에서 상호 불일치(aa>ba)로 나타났다. 즉, 군 간부의 군 가족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원을 요구하는 정도와 군 간부가 생각할 때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지원해줄 것인가에 대한 추정 인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하여 군 간부가 지역주민에 바라고 있는 것과 지역주민이 군 가족에게 지원해 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과는 두 집단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일치도(2)’에서는 지역주민의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실제적 인식과 지역주민이 추정한 군 간부 인식 간에는 전체 13개 하위요인에서 모두 일치한 것(bb=ab)으로 나타났다. 즉,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실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군 간부가 지역에 요구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정도 간에는 지역주민의 일방적 이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업군인은 군 임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인가족은 민간사회의 가족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74][75]는 사실에 대해 군의 인식과 지역사회 인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물론 조직에 대한 공중의 호의도는 주관적인 형태로 조직과 공중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감정을 형성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공중 관계에 대한 호의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군 조직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군인가족은 민간인이고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확도’로서, 군 간부의 실제 인식과 지역주민 추정 군 간부의 인식-정확도(1), 그리고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과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정확도(2)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말해 주는 것으로, 상대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정확도(1)’은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하여 군 간부의 실제적 인식과 지역주민이 추정한 군 간부의 인식 간에는 전체 13개 하

위요인에서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것(aa>ab)으로 나타났다. 즉, 군 간부는 군 가족복지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더 높은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지역주민이 추정하기에 군 간부들은 군 가족복지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주민은 군에 대해 오해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확도(2)’는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실제 인식과 군이 추정한 지역주민의 인식 간에는 일치하지 않음(bb>ba)으로써, 군 간부는 지역주민에 대해 오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녀양육교육/상담, 가족문화활동지원, 부모-자녀관계증진교육/상담, 부부관계증진교육/상담 등 4개의 하위요인에서 지역주민은 군 간부가 추정한 지역주민의 인식보다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개의 하위요인(가정경제문제교육/상담, 건강·영양·주거교육/상담, 자녀진로지도/상담, 가족친화문화체험활동 지원,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 아버지역할교육/상담,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상담, 복지관련정보지원)에서는 지역주민의 실제적 인식과 군 간부가 추정한 지역주민의 인식 간에는 일치하는 것(bb=ba)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 간 실제 인식과 추정 인식에서 일치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낮은 수준에서의 일치이므로 군 가족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에 대한 낮은 인식과 군 간부가 추정하기에도 지역사회는 군 가족복지에 대한 지원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일치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업군인들도 군인이기 이전에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고, 가족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75-82]는 관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타인에 대해 태도를 취할 때, 타인은 어떤 생각과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의식하게 되고, 반면에 타인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83][8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두 집단 간의 관계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넷째, ‘메타 동의’로서 군 추정 지역주민의 인식과 지

역주민 추정 군 간부의 인식이 일치하는 정도이며, 상호 간의 인식 추정이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연구 결과, 군 가족복지지원 6개의 하위요인(자녀양육교육/상담, 가족문화활동지원, 가족돌봄지원상담, 부모-자녀 관계증진교육/상담, 노후생활설계교육/상담, 가족의사 소통증진교육/상담)에서 두 집단 추정 간 불일치한 것 ($ba > ab$)으로 나타났다. 즉,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하여 군 간부가 추정하고 있는 지역주민 인식은 지역주민이 추정하고 있는 군 간부의 인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 가족복지지원 7개의 하위요인(가정경제문제교육/상담, 건강·영양·주거교육/상담, 부부관계 증진교육/상담, 자녀진로지도/상담, 가족친화문화체험 활동 지원, 아버지역할교육/상담, 복지관련정보지원)에서는 두 집단 추정 간 일치한 것($ba = ab$)으로 나타났다. 즉, 군 가족복지지원에 대하여 군 간부가 추정하고 있는 지역주민 인식과 지역주민이 추정하고 있는 군 간부의 인식은 낮은 수준에서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인과 그 가족이 지역에서 일상을 보내는 군 가족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복지 지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이어져야 한다[85]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군부대 주둔 지역사회에서 삶의 안녕감을 확보할 때 이는 곧 국방력강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군인가족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활용과 지원이 현재보다는 크게 향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군인가족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외부적 복지적 지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 간부와 지역주민과의 긍정적 관계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과 지역사회가 상호관계를 잘 관리함으로써 군인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폭 넓은 복지욕구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군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 업무의 특성상 군인과 그 가족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가족 및 부부생활을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군인가족들에게도 군의 특수성을 인정

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가족들이 이러한 기대에 적극 부응하지 못할 경우, 군인의 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군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와 지역 주둔 군부대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군인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은 '군과 군인가족'은 공동체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와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방의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 국민이 군인가족이거나 군인가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으로만 제한하여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전 국민적 차원에서 군인이 본인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의 군인가족은 사회복지의 정책과 실천 대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군 사회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군 당국이 연구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하고 실천분야를 열어둘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반 사회복지와는 다르게 군인가족복지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별거, 잦은 이사, 배우자 지원, 특별보호 대상가족, 자녀전학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근원적이고 개념적으로 접근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조사대상자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확률 표집을 사용한 관계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 문헌

- [1] 정선구, *직업군인 복지증진 방안 연구*, 서울:한국 국방연구원, 1992.
- [2] 조홍식, 강민철, "군인부인의 결혼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제1권, 제1호,

- pp.165-198, 2008.
- [3] 홍두승, *한국 군대의 사회학*, 서울:나남출판사, 1996.
- [4] C. C. Moskos, "Armed Force And Society: Trend in Military Organization," *Institution to Occupation*, Vol.4(Fall), pp.41-50, 1977.
- [5] M. W. Segal, *The Nature of Work and Family Linkages: A Theoretical Perspective*, The Organization Family. 1989.
- [6] 김명수, 박하일, 손기웅, 김현주, "민군관계의 발전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총서, 제13집, pp.155-175, 1994.
- [7] J. M. Mateczum and E. K. Holmes, Return, readjustment, and reintegration: The three R's of family reunion, In R. J. Ursano & A. E. Norwood(Eds), *Emotional after mathod the Persian GulfWar: Veterans, families, communities, andnations*, pp.250-28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1996.
- [8] A. Martin, "Life Satisfaction for Military Wives," *Military Medicine*, Vol.149, No.9, pp.512-514, 1984.
- [9] 박문규, *육군 군 간부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족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0] 정한수, *군 간부의 복지정책과 발전방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1] 강민철, *군인부인의 결혼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군인부인을 중심으로 한 스트레스와 대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2] 장지환, *군 간부의 주거지원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육군주거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3] 정미경, "지역사회 복지자원 활용을 통한 군인가족지원센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제4권, 제2호, pp.39-72, 2011.
- [14] 정미경, "군인가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연계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제5권, 제1호, pp.5-34, 2012.
- [15] 한국일보, "군 간부가 불안하다", 2014.03.08.
- [16] F. W. Kaslow and R. I. Ridenour, *The Military Family*, NY:Guilford Press, 1984.
- [17] P. A. Neenan, "Marital Quality and Job Satisfaction of Male Air Force Personnel: a test of the spillover hypothesis," *The Organization Family*, Vol.17, pp.59-76, 1989.
- [18] 국방부, *2008년 군인복지실태조사*, 2009.
- [19] 정미경, "군과 지역사회 간 조직-공중 관계성에 대한 상호 이해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pp.187-205, 2014.
- [20] 정미경, "지역사회 복지자원 활용을 통한 군인가족지원센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제4권, 제2호, pp.39-72, 2011.
- [21] 정미경, "군인가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연계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제5권, 제1호, pp.5-34, 2012.
- [22]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군인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11.
- [23] 국방부, *2008년 군인복지실태조사*, 2009.
- [24] 국방부, *2012년 군인복지실태조사*, 2013.
- [25] 국방부, *2010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
- [26] D. Darley, *The Military Family*, New York:Guilford Press, 1984.
- [27] 정미경, "군과 지역사회 간 조직-공중 관계성에 대한 상호 이해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pp.187-205, 2014.
- [28] 김현주, 홍두승, "한국의 군인가족: 자립과 적응을 중심으로," *전략논총*, 제2권, pp.305-356, 1994.
- [29] 조일남, 강진희, "일부 군인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조사연구," *국군간호사관학교논문집*, 제20권, pp.256-288, 2001.
- [30] 김현주, *군 자녀 보육시설 이용실태와 보육육구에 관한 연구:군인 아내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31] 김혜원, *군인가족의 학령전기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2] 박기수, *군 간부 가족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33] 이진욱, *군 간부의 직장-가정 균형이 스트레스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4] 주석진, 조성심, 김근아, "군인가정 자녀의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가족건강성과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권, pp.69-95, 2013.
- [35] 박미은, "군 간부 아내들이 인식한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제6권, 제2호, pp.39-63, 2013.
- [36] 정미경, "지역사회 복지자원 활용을 통한 군인가족지원센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제4권, 제2호, pp.39-72, 2011.
- [37] 정미경, "군인가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제5권, 제1호, pp.5-34, 2012.
- [38] 정호현, *군 사회복지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39] 국방부, *2008년 군인복지실태조사*, 2009.
- [4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군인가족, 현주소 진단과 지원방안*, 2010.
- [41] 국방부, *2012 군인복지실태조사*, 2013.
- [42] 양정선, 최윤선, 이정화, *경기도 군인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수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
- [43] 이채향, "직업군인의 직장-가정 갈등 원인과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제4권, 제2호, pp.5-37, 2011.
- [44] 국방부, *2008년 군인복지실태조사*, 2009.
- [45] 권현숙, *직업군인가족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육군항공가족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46] K. L. Kelly, *The effect of military-induced separation on family factors and child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94.
- [47] 함명화, *군인가족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갱년기 증상:일반가족 중년여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48] 태유월, 구자경, "군인가족 중년여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15권, 제1호, pp.519-534, 2014.
- [49] *Army Research Institute for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 NJ: Prentice-Hall, 1997.
- [50] 오기택, *군인가족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51] 이민정, *군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방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정서상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52] L. N. Rosen, and J. M. Teitelbaum, and D. J. Westhuis, "Children's reactions to the Dessert Storm Deployment:Initial findings from a survey of Arm families," *Military Medicine*, Vol.15, pp.465-469, 1993.
- [53] M. Kelley, E. Hock, K. Smith, M. Jarvis, J. Bonney, and M. Gaffney,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of students with enlisted Navy mothers experiencing military induced separatio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40, pp.461-471, 2001.
- [54] N. Ryan-Wenger, "Impact of the threat of war on children in military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71, pp.236-244, 2001.
- [55] A. Lincoln, E. Swift, and M. Shoteno-Fraser,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with parents deployed in military comba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64, No.8, pp.984-992, 2008.
- [56] 이영균, 최복희, "직업군인 가족의 삶의 질 실태 분석," *한국군사회복지학*, 제3권, 제2호, pp.25-45,

- 2010.
- [57] 국방부, 2008년 군인복지실태조사, 2009.
- [58] 국방부, 2010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
- [59] 방은상, "군인자녀 지원정책 발전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제5권, 제1호, pp.35-70, 2011.
- [60] 이영균, 최복희, "직업군인 가족의 삶의 질 실태 분석," 한국군사회복지학, 제3권, 제2호, pp.25-45, 2010.
- [61] 김현주, "홍두승, 한국의 군인가족: 자립과 적응을 중심으로," 전략논총, 제2권, pp.305-356, 1994.
- [62] 문채봉, 미군의 가족지원정책과 우리 군의 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09.
- [63] 최병순, 문영세, "직업군인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분석:육군 장교 인사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1호, pp.51-78, 2006.
- [64] 강한구, 백재욱, 성채기, 김상호, 안용희, 김규석, 군 주둔 지역경제 효과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09.
- [65] 허훈, "군과 지역사회의 협동거버넌스 구축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4호, pp.27-50, 2008
- [66] 김명환, "지역사회와 군 관계의 특성과 협력 구축방안,"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4호, pp.149-170, 2010.
- [67] 강원일보, 군 당국 1년간 주민 의견수렴 한번도 안해, 2014.12.16.
- [68] D. Darley, *The Military Family*. N Y:Guilford Press, 1984.
- [69] 국방부, 14년 군인가족행복지원서비스 주요조사 결과 통보, 2014.01.13.
- [70] 정미경, "군인가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연계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제5권, 제1호, pp.5-34, 2012.
- [71] 연합뉴스, 강원지사 후보들 맞춤형 공약으로 표심 공략, 2014.05.29.
- [72] 주석진, 조성심, "군인가정의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 비교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44권, 제6호, pp.57-80, 2014.
- [73] S. H. Chaffee and J. M. McLeo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communication research,"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16, pp.46-501, 1973.
- [74] 국방부, 2008년 군인복지실태조사, 2009.
- [75]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군인가족, 현주소 진단과 지원방안, 2010.
- [76] 박문규, 육군 군 간부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족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77] 정한수, 군 간부의 복지정책과 발전방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78] 강민철, 군인부인의 결혼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군인부인을 중심으로 한 스트레스와 대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79] 장지환, 군 간부의 주거지원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육군주거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80] 정미경, "지역사회 복지자원 활용을 통한 군인가족지원센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제4권, 제2호, pp.39-72, 2011.
- [81] 정미경, "군인가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연계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제5권, 제1호, pp.5-34, 2012.
- [82] 한국일보, 군 간부가 불안하다, 2014.03.08.
- [83] 김봉철, 최양호, "대학구성원들의 위기지각에 대한 상호지향성 분석:언론의 위기보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회, 제7권, 제3호, pp.7-41, 2005.
- [84] S. H. Chaffee and J. M. McLeo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communication research,"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16, pp.46-501, 1973.
- [85] D. Darley, *The Military Family*, NY:Guilford Press, 1984.

저 자 소 개

정 미 경(Mee-Kyung Jeong)

정회원



- 1999년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08년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2년 ~ 현재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군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개발과 평가